

녹색금융·재정지원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

2012. 5. 2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배경	1
II. 녹색금융·재정지원 이행점검 결과	3
III. 향후 추진 과제	13
1. 녹색산업 시장형성 지원	14
2. 녹색기업 성장환경 개선	16
3. 녹색수출 지원 확대	18
4. 녹색금융 지원 강화	19

I. 배경

- 녹색산업은 투자의 위험이 크고 회수기간도 장기여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
 - 녹색산업의 초기투자를 앞당기고 잠재적 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이 중요
 - * 주요국은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추진(네덜란드 Green Fund Scheme, 영국 Green Investment Bank, 호주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등)
- 이러한 점을 감안, 정부는 녹색산업에의 자금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금융·재정지원 대책을 발표·추진
 - * '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'('09.7 4차 보고대회), '녹색 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·금융 지원'('10.7. 8차 보고대회), '신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실물·금융 연계강화'('11.4.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)
- 그러나, 정부의 다양한 금융·재정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, **녹색금융·재정지원이 불충분**하다는 것이 산업계 일각의 평가
 -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, 대·내외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녹색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원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 제기

☞ 정책금융지원, 민간금융활성화, 녹색기업 자금공급을 위한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등 그간 발표된 대책과 이행 상황을 종합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

참고 1

주요 녹색산업 현황

- 태양광 등 일부 녹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요 확대의 여지는 큼
 - 태양광산업은 발전단가 하락, 신흥국 시장수요 확대,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조치로 수요회복이 기대되며, LED세계시장도 빠른 성장을 지속할 전망
 - * 미국은 금년 3월 20일 정부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2.9%~4.73%의 상계관세 적용을 결정
 - * LED 세계시장(억불): 343('10)→694('12)→1,147('15)→2,650('20)
 -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(RPS) 실시('12년), 공공기관('12년 30%), 아파트 주차장 LED조명설치의무화('12년 하반기) 등으로 국내수요도 확대될 전망
 - * 서울시는 서울전체 주요건물 옥상 및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, LED보급협회는 경기도, 서울시 등 지자체와 아파트 주차장, 대형마켓,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LED 교체 추진
- 그러나 금융권의 단기적 리스크 관리 중심의 자금운용으로,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
 - 민간은행의 녹색대출 증가 속도는 국책은행에 비해 더디고, 신용리스크가 낮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

< 연도별 녹색대출 잔액(은행연합회) >

구 분	'09년말	'10년말	'11년말
전체 녹색대출	5.5조원(100%)	9.9조원(100%)	14.8조원(100%)
· 국책은행 (산은·기은·수은)	3.1조원(56.4%)	6.4조원(64.6%)	10.4조원(70.3%)
· 민간은행	2.4조원(43.6%)	3.5조원(35.4%)	4.4조원(29.7%)

* '11.3분기말 민간은행 녹색대출 중 대기업 지원비율은 57%로 '10년말 대비 16%p 증가('11.12, 녹색위 정책연구용역보고서)

II. 녹색금융·재정지원 이행 점검 결과

1. 점검 대상

- ◆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('09.7월),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('10.7월), 신성장동력 금융강화방안('11.4월)에 포함된 총 3개분야 63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

1] 간접금융 조달

-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·중견기업 온렌딩 대출, 녹색 수출금융, ESCO 자금 등 녹색기업·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, 기술평가보증 등 녹색기업에 대한 신·기보 보증 확대
- 민간금융회사 면책사유 구체화,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출시

2] 직접금융 조달

- 녹색금융 선도기관 육성 및 녹색펀드 조성,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 조성, 벤처투자 활성화, 우선손실충당제도 개선
- 신성장분야 코스닥 상장특례 운용, 세컨더리 펀드 확충, 프리보드 제도 개선, P-CBO 발행,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

3] 녹색금융 인프라

- 녹색인증제 실시로 투자대상발굴 지원, 녹색금융종합포털 구축, 녹색경영공시제도 도입, 신용정보회사 역할 강화

2. 점검 결과

< 종합평가 >

- ◇ 총 63개 세부과제 중 대부분의 과제는 정상추진 중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
-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출시, 핵심 녹색산업(LED 등)에 대한 금융지원 등 일부과제는 추진이 지연되거나 미흡

가. 주요 성과

1] 간접금융(용자·보증) 조달 지원

-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확대
 - * 정책자금대출(조원): ('09년) 3.2 → ('10년) 5.7 → ('11년) 8.0
- 민간금융회사 대출에 대한 신·기보의 보증규모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
 - * 신·기보 보증규모(조원/실적): ('09년) 4.3 → ('10년) 5.4 → ('11년) 7.8
 - * 녹색기업 보증한도 확대(30억원→운전자금 70억원/시설자금 100억원), 보증료율 인하(0.2%~0.5%p 차감), 보증비율확대(50~85%→90% 적용)
-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여신담당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금융회사 면책사유 구체화('11.7)
 - * '신성장동력 금융지원을 위한 면책제도 운영방안' 마련
 - * 자금지원 과정에서 규정·절차 위반 또는 부실 등 발생시 고의·중과실 등 개인적 비리가 없는 등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면책

② 직접금융(채권, 주식) 조달 지원

-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
 - * 펀드조성액 총 5조 654억원('11년 누계): 정책금융공사(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3조 1,746억원, 녹색산업투자회사 1,000억원), 지경부(신성장동력펀드 1조 11억원), 중기청(녹색·신성장펀드 7,897억원)
- 채권시장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P-CBO 발행
 - * '11년 P-CBO 발행규모: 신보 9,178억원, 기보 2,991억원
 - * '11년 P-CBO발행액 중 녹색기업채권 편입비중: 신보 27.0%, 기보 29.1%
-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코스닥상장 요건 완화('11.3),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펀드 확충('10년 560억원→'11년 1,000억원)
 - * 녹색산업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설립년수·이익규모 등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과거 벤처기업 수준 이상으로 완화
- 녹색산업지수 개발('10.12), 녹색ETF(Exchange Traded Fund)* 상장('11.1)
 - * 미래에셋맵스 TIGER 그린, KTB GREAT GREEN

③ 녹색금융 수요창출을 위한 인프라 강화

- 녹색인증제 도입('10.4)으로 총 655건의 인증서 발급
 - * 인증: 녹색기술 572건, 녹색사업 17건, 녹색전문기업 66건('12.2월기준)
- 녹색경영 자율공시제도*를 도입('11.1)하여 공시유도('11년 91건)
 - * 녹색인증·온실가스등 관리업체, 환경지원법상 녹색기업 지정·취소 사실 공시
- 공공조달대상을 에너지소비효율, 유해물질 배출 등에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제한하는 '최소녹색기준 제품' 도입('10년 31개→'11년 50개)
 - * 녹색공공구매 실적(억원): ('09) 20,243 → ('10) 18,365 → ('11) 30,381
- 녹색금융 종합포털구축('11.3)으로 정보 제공 확대

나. 미흡한 점 및 개선 방향

◇ 녹색산업은 여전히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 자금 유입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

- 잠재적인 매출수요가 크나 기존의 금융지원 방식과 관행으로는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비교적 큰 녹색 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
 -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구성제품의 장기성능유지보장 여부가 수출 확대의 요건으로 부상
- ⇒ **녹색제품의 장기성능유지를 보증하는 보험상품 출시 필요**
- LED의 경우 소비자는 자기 부담없이 설치하고 전기요금 절약액으로 상환하길 희망하나, 설치기업은 대출을 받을 경우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 발생
- ⇒ **금융회사가 기업의 매출채권을 적정가에 할인 매입하는 지원 필요**
-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여신이 주로 신·기보 보증, 담보에 의존하고 여신규모도 녹색기술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데 미흡
 - * 보증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추정대상기간이 1년이어서 창업기업이나 매출액이 정체기에 있는 신기술 개발기업은 충분한 자금조달에 애로
- ⇒ **기업의 미래가치, 성장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연계 보증·대출·투자를 확대**

□ 금융회사는 위험분담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안전한 투자대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녹색금융 확대의 주요 제약 요인

○ 녹색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전망보다 단기적인 업황에 대출 여부가 좌우

⇒ 금융회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관의 기능 강화 필요

○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와 직접투자를 하는 일부 펀드의 경우 집행률이 낮음

⇒ 신재생 상생보증펀드 지원확대, 녹색인증기업 확대, 재정 지원 확대 등으로 투자를 활성화

* '12.2월 현재 녹색인증사업 17건, 녹색전문기업은 66개에 불과

신성장동력 및 녹색 관련 펀드 현황

관련 부처	펀드명	조성액 (억원)	투자액 (억원)	집행률 ('12.2월말 기준)	결성일
지경부	신성장동력펀드	10,011	3,263	32.6%	'09.6
중기청	모태펀드 내 신성장동력자펀드	7,897	3,014	38.2%	'09.6
금융위	(정금공)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	31,746	10,533	33.1%	'10.11
	(정금공) 녹색산업투자회사	1,000	299	29.9%	'10.7
	(산은) 신성장동력 Green Future 펀드	1,001	100	10.0%	'09.12
합 계		51,655	17,209	33.3%	

Ⅲ. 향후 추진과제

◇ 초기단계의 녹색산업이 안정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·재정지원 및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

○ 태양광, LED 등 주요 녹색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 지원 방안을 수립·추진

녹색금융·재정지원 확대로 녹색산업발전을 뒷받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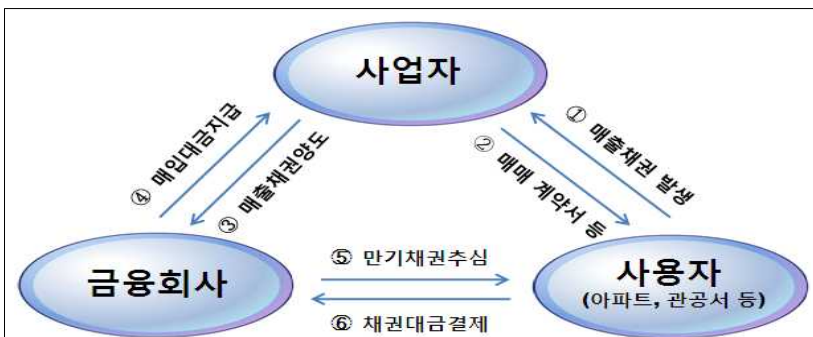
추진 전략	녹색산업 시장형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태양광, ESCO 사업등으로 팩토링 금융 지원 확대 햇살가득 홈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용자 자금 신규 지원 녹색분야 투자 확대
	녹색기업 성장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력 중심의 녹색산업 지원 강화 창업·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
	녹색수출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지원 금융 강화 장기 성능보장보험 도입 유도
	녹색금융 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정책금융 지원 확대 녹색인증제도 개선 및 금융정보 제공확대

1. 녹색산업 시장형성 지원

가 태양광, ESCO사업 등에 팩토링 금융지원 확대

- 아파트 주차장 신축·개보수시 LED설치 의무화 추진으로 LED수요 증가가 예상되나, 교체자금을 대출 받아 전등교체를 해주고 전기요금으로 투자회수를 하는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증가
 -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팩토링금융상품 공급확대 필요
 - * 팩토링금융상품: 기업이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면, 금융회사는 할인액과 수수료를 공제한 매출채권금액을 기업에 지급
- 정책금융공사가 현재 운영중인 LED 팩토링 지원프로그램의 한도를 상향조정('12년 350→700억원)하고, 지원대상도 LED외에 태양광 사업, 에너지절약전문사업 등으로 확대
 - * 정책금융공사는 중개금융회사(산은캐피탈)에 장기(최대 6년)로 온렌딩 자금을 제공하여 중소 LED기업의 매출채권 팩토링을 지원
- 팩토링금융상품 실적이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 금융공사가 온렌딩자금 배정시 우대

<팩토링금융상품 구조>



나 햇살가득 홈 사업에 신재생에너지자금 신규 지원

- 태양광 내수시장 창출과 자발적 태양광 주택보급을 위해 「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」 용자자금을 햇살가득 홈 사업에도 신규지원
 - * “햇살가득 홈”은 금융회사가 신청가구에 설치자금을 융자하면, 신청가구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설치·시공하고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
- 햇살가득 홈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·편의성 제고
 - 태양광 설비 A/S 기간 연장(3년→5년), 소비자 A/S 지원 콜센터 구축, 소비자 만족도 평가 등 사후관리 체계 개선
 - 태양광산업협회에서 공동으로 콜센터 및 홈페이지 구축·운영, 홍보책자 및 브로셔 발간 배포 등 추진

다 녹색분야 투자 확대

-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녹색분야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요 창출 지원

< 녹색분야 투자 계획 및 실적(조원, %) >

구분	'09	'10	'11	'12	'13	합계
녹색성장 5개년계획	17.4	24.2	25.7	20.6	19.4	107.4
-예산 (GDP 대비)	17.2 (1.6)	24.5 (2.1)	25.7 (2.0)	21.9 (1.6)	-	-
-4대강사업 제외시 예산	16.4	18.1	18.8	20.6	-	-

- 건축물·전기제품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 추진

2. 녹색기업 성장환경 개선

가. 기술력 중심의 녹색산업 지원 강화

□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평가·보증지원 강화

- 녹색산업의 분야별 특성에 맞는 **기술평가모형(녹색기술평가모형)**을 개발하여 보증 및 투·융자용 평가모델로 활용

* 녹색기술평가모델을 통해 산출한 '녹색기술평가인증서'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유도

-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의 미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보증 규모를 결정하는 **기술가치 연계보증제도** 도입

*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, 매출이 정체상태이거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

□ 정책금융공사의 기술력 기반 민간 금융지원 유도

-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자금 배정시 **녹색기술평가인증서부대출실적이 높은 금융회사 우대**
- **녹색기술평가인증서 발급기업**에 대한 운용사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**인센티브 부여**

* (예시) 신규로 녹색관련 정책펀드 결성 추진시 녹색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성과 보수를 높이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

□ 녹색기술평가 비용 지원

- 녹색기술평가 신청기업의 평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**평가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정부 지원**

* 현재, 벤처·이노비즈기업, 특허권 보유기업 등에 대한 기술평가시 지경부 및 특허청에서 평가비용 일부(75%) 지원 ⇒ 녹색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

나. 창업·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

□ R&D 비용 세액공제 연장

- '12년말 일몰예정인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분야 R&D 세액공제*제도를 녹색분야 기업에 대해 연장 검토

* 10대 신성장동력 분야 46개 기술 및 18대 원천기술 분야 45개 기술에 대한 R&D비용 세액공제 20%(중소기업 30%) 시행('10.2월)

□ R&D 프로젝트 보증 도입

- R&D 소단계(개발→사업화→양산)의 소요자금을 일괄심사 후 단계별로 보증지원하는 "R&D 프로젝트보증" 도입

* 기술보증기금이 R&D 소주기 소요자금에 대해 일괄 심사 후 성과목표 및 한도 설정 후 R&D 단계별로 성과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자금 지원

□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선

- **정당한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한 경우 사후 부실화**되어도 은행 대출담당자들을 면책*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* 감독규정 및 은행내규상의 면책요건의 구체화, 은행의 자체 면책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칙적 인정,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의 성과평가 불이익 방지

□ 연대보증제도 개선

- **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**하고 법인은 경영에 책임이 있는 **실제 경영자만 연대 보증**

□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(가칭 KONEX)을 '12년 중 신설하여 벤처·중소기업이 원활히 자본을 조달하도록 지원

3. 녹색수출 지원 확대

가. 수출지원 금융 강화

- 신재생에너지 대상 EDCF지원방안*이 적극 활용되도록 수출입은행,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EDCF 해외진출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원국 사업 발굴

* 신재생에너지분야 EDCF지원우대: ①무이자혜택 대상국가 확대 (저소득국 I,II그룹→III,IV그룹), ②거치기간 연장(7~10년→10~15년)

- 수출입은행이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활용하여 태양광, 풍력 발전 등 해외녹색사업에 대한 PF지원을 확대

* 녹색수출 지원규모(조원): ('09)1.3 → ('10)2.4 → ('11)3.9 → ('12)5

- 해외 녹색사업 발굴 및 민간금융기관의 PF 참여 확대 등을 위해 금융자문·주선 역량을 강화

* 금융자문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조직 개편

나. 장기 성능보장보험 도입 유도

-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모듈설치 등 태양광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제품의 장기성능을 보장하는 보험이 유용하나 국내 보험상품이 미출시

* 미국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장기(25년) 성능보장보험 既출시

- 확대되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에 국내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'장기 성능보장보험' 출시 유도

4. 녹색금융 지원 강화

가.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

- (기술보증기금)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녹색기술 평가역량 강화

- 담당 전문조직(가칭 '녹색기술평가부')을 신설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 10대 녹색기술 분야별 평가전문인력을 확보

* 10대 녹색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 및 기술평가팀 구성

- 녹색기술에 특화된 평가모형 개발·운용 등 (後述)

* 녹색기술평가모형 개발 및 기술평가 기능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

- (정책금융공사) 녹색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

- 녹색산업관련 종합금융 서비스제공을 위한 「녹색금융 지원단」을 설치

- 녹색상품 기획, 녹색 산업분석·기술 조사, 녹색투자대상 발굴, 녹색여신 승인 등 수행

- 녹색금융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하되, 녹색산업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 등을 채용하여 전문성 보강

나 정책금융 지원 확대

-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녹색기업 용자·보증 규모를 '12년 21.4조원으로 확대

< 정책금융기관 녹색산업 지원 계획 >

단위 : 조원

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
계획	5.3	10.8	17.4	21.4
실적	8.2	15.5	20.9	-

- * 정책금융공사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수출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, 무역보험공사
-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지 녹색기업 지원실적을 반영
 - *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때 녹색금융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기준에 반영

-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지원 확대

- 제조업자 및 발전사업자에 한정된 추천대상기업 범위를 확대
 - * 신재생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기업, S/W개발기업, 2차 협력업체 포함
- 참여 은행(기업, 신한, 우리은행), 대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협회로 제한된 추천경로를 보증기관까지 확대
 - *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지원대상을 추천
 - * “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”는 대기업(11개), 한전, 발전자회사(6개), 은행(3개)이 1,030억원을 출연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신·기보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영위기업에 보증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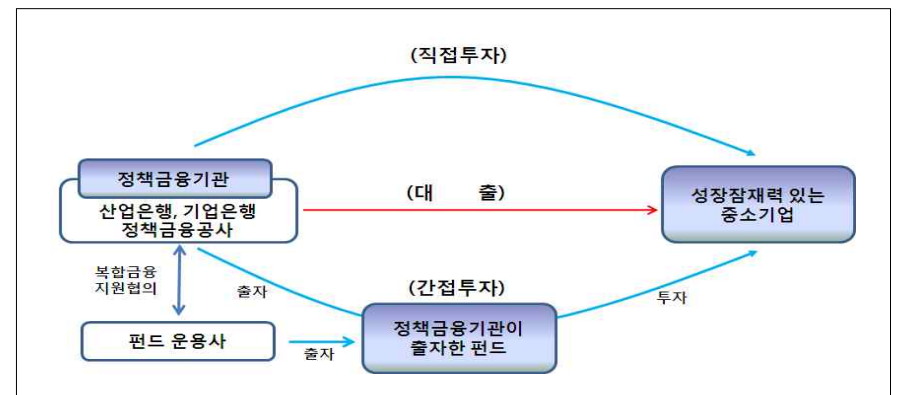
- 녹색기업 주식·채권에 투자하는 정책금융기관 펀드 확대

-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를 추가 조성 (3.2조원,14개 펀드('11)→ 3.8조원,18개 펀드('12))
- 산업은행 신성장동력펀드(Green Future 펀드) 집행률 제고(10%→50%)
 - * 현재 총 3개 기업(300~400억원 투자집행 예상)에 대한 투자절차 진행 중
- 정책금융공사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집행률 제고(29.9%→ 50.0%)

- 복합금융 프로그램(package finance) 도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동시에 지원

- 정책금융기관이 적합기업 발굴 후, 기업의 상황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투자·대출 지원
 - * 창업초기기업은 초기 R&D단계 투자시행 후, 사업화 단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성장기업은 개별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대출 및 투자 매칭
- 녹색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해 투융자복합금융(이익공유형/성장공유형 대출) 지원 확대(중기청)

<복합금융지원 구조>



다 녹색인증제도 개선 및 금융정보 제공확대

- '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' 신규 도입
 - 녹색인증기술이 기업의 실제 매출로 연계되도록 녹색인증 기술을 이용하여 실용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'녹색 기술제품확인제도' 도입
 - * '12.2월말 현재 녹색기술인증 572건, 녹색전문기업 66개, 녹색사업 17건
- 녹색전문기업 요건 완화 및 녹색전문기업 우대
 - 녹색전문기업요건을 완화하여 투자대상 확대
 - 녹색인증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: 현행 30%이상→20%이상
 - 녹색전문기업 등 인증보유기업에 대해 여신심사요건 완화, 보증료우대, 펀드 투자대상 편입시 가점 부여 등 우대
 - * 현재는 기술보증기금이외의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녹색인증여부와 관계 없이 녹색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우대혜택 제공
- 은행권 녹색금융 통계 정비
 -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중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통계의 신뢰성 제고
- 금융정보 환경 개선
 -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녹색경영정보 공시실적우수법인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
 - * 공시우수법인에 대해서는 신주상장·변경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('10년 상장법인 평균 연부과금: 337만원) 면제
 - 중소기업대상 통합금융지원 정보시스템 '기업금융나들목'에 녹색금융분야 신설

참고3

향후 조치계획

추진 과제명	주관부처	추진일정
① 조기사장 형성을 위한 지원확대		
① 태양광, ESCO 사업 등으로 팩토링 금융지원 확대	금융위	연중
② 햇살가득 홈 사업에 신재생용자자금 신규 지원	지경부	'12.5월
③ 녹색분야 투자 확대	재정/지경	연중
② 녹색기업 성장환경 개선		
① 녹색기술평가모형개발 및 평가비용지원	금융/지경	'12.7월
② 기술력 기반 민간 금융지원 유도	금융위	연중
③ R&D 비용 세액공제 연장	재정부	'12.9월
④ R&D 프로젝트보증, 펀드제도, 연대보증,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등 중소기업기업 성장환경 조성	금융위	연중
③ 수출지원 확대		
① 신재생 EDCF 해외진출협의회 신설	재정부	'12.6월
② 해외녹색사업 PF지원 확대 및 금융자문·주선 역량 강화	재정부	연중
② 장기 성능보장보험 도입 유도	금융위	연중
④ 녹색금융 지원 강화		
①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	금융/재정	'12.9월
② 녹색용자·보증규모 확대	관계부처	연중
③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지원 확대	지경부	'12.9월
④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확대	금융위	'12.9월
⑤ 복합금융 프로그램 실시	금융/중기	'12.5월
⑥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 도입 및 녹색전문기업 요건 완화	지경부	'12.10월
⑦ 녹색전문기업 등 인증보유기업 우대	금융위	'12.10월
⑧ 녹색금융 통계 정비 및 녹색금융정보 환경 개선	금융위	'12.9월